

1. 머리말

최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여기서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등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 또는 그러한 개별 서비스들이 수행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이라는 좁은 의미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18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인터넷 발전사의 선단(先端)에 있는 대표 사례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유무선 인터넷이나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행위와 문화의 단면을 현시점에서 응축하여 담고 있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웹1.0의 시대를 넘어서 웹2.0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정보혁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는 단순히 새로운 소통 수단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지난 5년 여 동안 불러온 변화는 꽤 많다. IT 분야에서 5년은 다른 분야의 50년에 비견될 만하다고들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IT 분야만큼 '혁명'이라는 말을 '용감하게' 사용하는 데도 없을 것 같다. 언론 지상에 '소셜 미디어 혁명' 또는 'SNS혁명'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소셜 미디어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뜻(命)'을 '새롭게 바꿀(革)' 정도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 기술과 미디어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가 혁명인지의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예기치 않은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는 정도로만 논하자.

소셜 미디어의 등장이 혁명을 논할 정도로 심상치 않은 현상인 데 비해, 그것이 야기한 변환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려하면 혁명(革命)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더욱 부담스럽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변환(變換,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변환은 말뜻 그대로 '내용'의 '변화'보다는 '형태(form)'의 '변화(trans)'에 초점을 맞춘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변환은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담아내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용'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담는 '용기'가 변해서 무언가 새롭게 볼 여지가 있는 현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뜻을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혁명적 변화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아직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소셜 미디어가 불러온 변화가 종전의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많이 펼쳐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환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 및 가치관도 변하고, 사회문화적 삶의 형태도 예전

에 비해서 크게 달라졌다. 정치 분야도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의 지평을 바꿔놓았다.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국내 정치의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는 벌써 외교의 과정과 영역 및 주제를 바꾸고 있으며, 21세기 세계정치의 게임과 행위자들의 성격까지도 바꾸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언론학회 편, 2012).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야기하는 다층적 '변환'은 단순히 중립적 현상이 아니고 권력이 깊숙이 관련된 정치적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저자들이 선정한 이론적 논제는 권력의 변환이다. 통칭해서 '인터넷 권력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의 저자들은 5년 전 『인터넷 권력의 해부』(한울)라는 책을 통해서 인터넷이 권력의 성격과 구도 및 소재의 변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지를 펼친 바 있다(김상배 편, 2008). 당시 저자들이 '해부'하고 싶었던 것은 인터넷 권력의 현상 안에 담겨 있는 권력의 양면성이었다. 다소 단순화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 양면성을 요약하자면, 인터넷 초창기의 웹1.0이 위로부터의 권력변환을 촉발시켰다면, 웹2.0의 부상은 아래로부터의 권력변환을 낳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인터넷의 권력정치는 기존의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세력이 맞서고 있는 양상으로 그려진다(김상배, 2010a).

5년 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시에는 맹아적으로만 포착되었던 밑으로부터의 대항 세력이 부쩍 더 큰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힘의 핵심은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나온다. 부연컨대, 이러한 '소셜 권력' 또는 '네트워크 권력'의 작동은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

한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 혁명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통의 통로를 열고 공감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행동을 조율할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이런 점에서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폭발적 잠재력이 있다. 유선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권력과 유무선 복합 환경을 배경으로 한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것을 비교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소셜 미디어가 인터넷 권력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첫째,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성격을 단순히 새로운 소통 수단의 도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적 관계맺기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했다. 또한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권력이 어떻게 기존의 지식 권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소셜 미디어가 국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선거정치나 정당정치 또는 의회정치의 변환이라는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가 외교의 과정과 영역 및 주체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끝으로, 소셜 미디어가 21세기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 지식질서의 모습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의 방향을 짚어보았다.

2. 소셜 미디어의 부상과 그 위력

1) 새로운 미디어의 부상?

우리가 흔히 영어의 약자로 표기하는 SNS는 온라인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관계맺기를 도와주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 더해서 최근에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SNS의 사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사실 SNS는 서비스라기보다 미디어로 보아야 한다. 단순히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성 미디어처럼 뉴스를 담아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SNS는 기성 미디어와는 달리 사람들이 맺은 사회관계의 연결망을 타고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SNS는 소셜 미디어이다. SNS나 소셜 미디어라는 말은 모두 우리말로 번역되기보다는 다소 생경한 알파벳의 조합이나 음차어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생긴 이유로는, 언어의 번역이 메울 수 없는 '의미의 공백'에 대한 망설임도 있겠지만, 우선 이 용어들에 담기는 현실의 낯설음을 풀어야 할 것 같다.

소셜 미디어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특징은 속보성, 관계성, 긴밀성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된다. 우선 소셜 미디어는 기성 미디어보다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며, 지구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이 출현한 사회적 관계맺기를 도와주는 수단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거나 관계맺기를 하는 수단이라기보다 뭔가 긴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복합적인 성격의 미디어이다. 이러한 복합성은 1차 집단적 공동체 관계와 2차 집단적 사회관

계의 복합, 이성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의 복합, 그리고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복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상배, 2012a).

첫째, 소셜 미디어로서 SNS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관계는 ‘소셜’을 단순히 ‘사회’라고 번역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社會)로 번역하는 ‘society’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2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형성되는 소셜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익 기반의 관계맺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구성하는 공동체(community), 즉 ‘1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배경에 깔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SNS의 소셜 네트워크는 공동체(1차 집단)와 사회(2차 집단)의 중간 정도가 되는 ‘1.5차 집단’의 사회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바로 ‘소셜’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 이유이다(김상배, 2010b).

트위터의 사례를 보자. 트위터는 대면관계의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관계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트위터에서 정보의 전달은 매스 미디어의 경우처럼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위터의 핵심은 리트윗(Retweet)이다. 내가 받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를 리트윗하는 대상은 생면부지의 남은 아니다. 또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타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트위터는 친한 지인들을 상대로 하여 물어보고 알려주는 모델이다. 트위터는 공식적인 관계가 확장되는 와중에도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사용자들의 심리를 공략한 모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트위터의 확산은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근접

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둘째, 트위터가 활용하는 사회관계의 복잡성은 거기에 담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내용의 복잡성으로 나타난다. 기성 미디어와는 달리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해석과 주관적 편집, 선별과 감정이 담긴다. 트위터에서는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말’이 리트윗된다.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인 동시에 감정을 공유하는 채널이다. 다시 말해 트위터에서는 객관적 정보의 전달과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교환과 더 나아가 정서적 공감도 중요하다. 이렇다 보니 전달된 정보의 내용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트위터의 소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트위터의 팔로워 커뮤니티는 유명 연예인들의 팬클럽에 비견되기도 한다.

끝으로, SNS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성격도 복잡적이다. 구전 미디어가 사적(私的)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은 이야기를 전했다면, 매스 미디어는 공적(公的) 공간에서 이뤄지는 큰 이야기를 널리 전파시켰다.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공사(公私)의 복합 공간’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적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공적 공간이다.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를 전시하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구전 미디어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듯이 리트윗도 그 구조와 논리는 입소문과 다를 바 없다. 트위터는 예전 같았으면 사적 공간에서 친구들과고만 나누었을 법한 이야기를, “내가 어제 저녁 자리에서 들었는데 말이야……”라고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털어놓는 것과도 같은 모델이다. ‘골방 모델’과 ‘광장 모델’의 복합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리트윗되면서 전파되고 추가 정보들이 더해지면서 정보의 퍼즐 맞추기를 하는 복합 공간이 생겨난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다양하고 중층적인 네트워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여 년 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물리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그 위에 정보와 지식의 네트워크가 차곡차곡 얹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좀 더 밀접하고 뻘뻘하게 자리 잡는 현상이 발생했다. 소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 즉 '망중망(網重網)'이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었다(김상배, 2010). 이렇게 등장한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노드들이 링크(link)로 연결된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비유컨대, 마치 원생동물인 '아메바'와 같이 유연한 외연을 가지고,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인 '레고 블록'처럼 쌓고 허물면서 그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어느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금세 복구되는 특징을 지닌, 그야말로 '복합 네트워크(complex network)'라고나 할까?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은 이메일을 주고받고 웹 사이트에 정보와 지식을 올려놓으며, 이를 활용하여 과거처럼 신문과 방송에 의지하지 않고도,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다 못해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백과사전의 편집에 참여하기도 하고, 프로 비평가들을 뺀치는 평론을 주고받는 온라인 동호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합 네트워크의 공간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공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적인 소통과 친밀한 교감까지도 오고간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는 주위의 친구들

에게 글과 영상을 추천받고 이들을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리는 일종의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그 기저에 깔고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웹 환경에서 문화가 확산되고 대외적으로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에 의지해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수동적인 청중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능동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찾아서 인터넷 세상으로 나서고 있다(김상배, 2010a).

2) 소셜 미디어의 위력?

이 대목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기술과 정보 및 지식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가 어떠한 경우에 '행동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을 모으거나 서로서로 공감하는 바를 열기설기 엮어서 (단순히 개별적인 요소들을 집합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치사회학에서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주제였다. 최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달라진 것이 있다면 소위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복합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이, 예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집단행동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집합감성(collective emot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성적 또는 정서적 변수가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집단행동 문제와 관련하여 클레이 서키(Clay Shirky)는 그의 저서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Here Comes Everybody)』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석들을 소개하고 있다. 서키가 주목하는 것은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인식의 공유'가 지니는 중요성이다. 그에 따르면, 집단행동과 관련된 인식의 공유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성숙되어 발현된다고 한다(서키, 2008).

제1단계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아는 단계'이다. 각자 '주관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단계인데, 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행동이 유발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제2단계는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단계'이다. 남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간(間)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이다. 공감의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모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행동이 촉발되지 않는다. 제3단계는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단계'이다. 사람들이 각자 알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행동을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상의 세 단계 논의에서 실제로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3단계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못하고 외래어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의 하나이다. 영어의 'communication'에는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참여해서 공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클레이 서키가 강조하는 '인식의 공유'는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는 필수불가결한 전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절한 도구나 환경이 제공되었을 경우에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급속히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례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소셜 미디어 혁명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의 힘을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성격의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결집하여 유례없는 사회적 파장과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발휘하는 위력의 핵심은 널리 소수자들을 결집하는 힘에서 나온다. 예전 같으면 묻혀버렸을 작은 이야기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쉽게 개진되고 널리 퍼져나가서 활발한 참여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을 본다. 이러한 권력은 기존에 군림해왔던 지식권력에 대항하면서 지식질서의 구조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소셜 미디어, 좀 더 넓게는 인터넷 미디어가 발휘하는 정치적 위력을 실감해왔다.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 관심을 끄는 안건 중의 하나는, 과연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성 미디어의 지식권력을 대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기사를 생산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과 전문기자의 역할과 권위를 나누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좀 더 빨리 뉴스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기성 미디어의 프레임에 잡히지 않던 숨겨진 어젠다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가 기성 미디어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대항프레임(counterframing)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해 미디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프레임을 짤 것이냐?’의 문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어젠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신문이나 방송을 대체할 가능성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최근 소셜 미디어가 괄목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나 철학이 전통 미디어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뉴스에 담기는 내용 자체의 정론성이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통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큰 차이가 있다. 전통 미디어가 어떠한 형태로건 객관적인 뉴스 보도와 정치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추구한다면, 소셜 미디어는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 자신들의 활동을 묶으려 하기보다는 ‘이야기 전쟁’이 벌어지는 플랫폼만을 제공하려 한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는 입장이다.

이렇듯 소셜 미디어의 약진이 기성 미디어에 대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매스 미디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셜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와 일정한 정도의 공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트윗 분석에 따르면, 트윗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매스 미디어의 헤드라인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가끔 자연재해라든지 속보 또는 숨겨져 있던 작은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을 대체한다. 아직까지는 소셜 미디어의 주된 콘텐츠는 매스 미디어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는 기성 매스 미디어의 ‘반포(頒布) 모델,’ 즉 생산자가 중심에서 뉴스를 뿌려주는 모델과 ‘유포(流布) 모델,’ 즉 일반인들이 서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하는 모델의 복합 모델이다.

3. 소셜 미디어와 정치외교의 변환

1) 소셜 미디어와 정치의 변환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발되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바람의 이면에는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힘입어 증대된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집권층의 비리와 부패가 세상에 알려지고, 또한 좀 더 중요하게는, 이에 분개하여 거리로 나선 동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촉발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생각과 공감의 집합이 실제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구성원들 간의 ‘인식의 공유’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인데 소셜 미디어가 그러한 역할을 특히 담당했다. 소셜 미디어라는 ‘기술 변수’가 중동에 민주화의 씨앗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가 변화의 주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Shirky, 2011).

멀리 중동의 사례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한국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정치’는 엄연한 독립변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서 열린 촛불집회나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네티즌들의 토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식 엘리트들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던 무역협상과 외교안보정책의 쟁점들이 일반 국민들도 한마디씩 거들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혁명으로 대변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치’는 한국 정치와 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어놓을 선봉장의 노릇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치렀던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는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의 실제 위력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은 유권자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주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전처럼 수동적인 청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능동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찾아나서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셜 미디어 기반의 ‘생각과 공감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행동의 네트워크’로 전화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실제 사례를 최근에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소위 ‘재스민 혁명’에서 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향후 정치 과정에서도 소셜 미디어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2030 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보수와 진보 중에서 어느 세력에 더 유리하냐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소셜 미디어도 미디어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어온 ‘미디어 편향성’이라는 것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위계조직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관계, 그리고 보수 이념보다는 진보 이념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 형태나 이념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소셜 미디어가 젊은 세대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거대한 정치담론이 아니다. 소위 '투표인증샷놀이' 등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은 생활정치 또는 재미정치의 작은 담론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정치적 소통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정치제도의 변환과 민주주의의 전망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기성 정치제도의 변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 기존의 정당정치를 무력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여야 정당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사건이 있고 난 뒤 정치학에서 중요한 화두는 과연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는 정당이 필요 없느냐는 문제였다.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에 비해서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여 결집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 그 이유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셜 대표를 내고 그 대표가 직접민주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대두되었다.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소셜 미디어가 다수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나온 대표가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제대로 된 대표이냐의 문제가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란 것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측면이 있다. 대표성의 균질성이란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적 참여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민주주의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는 정당정치의 미래를 예견해보면, 우선은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변화에 민첩하게 편승하여 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정당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소셜 미디어가 야기한 변화를 도구적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소셜 미디어의 도입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것을 담아내는 제도와 조직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방향 자체는 현대 정당의 변화 방향과도 맞다. 거대 조직이 축소되고, 정책이나 비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라는 채널을 통해 모이게 되는 방식의 정당이 불가피하다. 물론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당의 공적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 누군가 끝까지 남아서 공공성의 마인드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역사적으로 계속 형태를 바꿔왔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태생적으로 소셜 미디어의 힘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류의 것이다. 마치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를 따르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를 따라서 검색을 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힘이다. 이는 평소에는 느슨한 고리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면서 널리 확산되는 힘이다. 또한 균질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별떼의 움직임처럼 우르르 쓸림 현상이 발생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셜 미디어의 권력은 도마뱀의 꼬리와도 같은 권력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려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데가 없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위력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폭로와 루머의 확산,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의 문제이다. 예전 같았으면 몇몇의 친구들만 알았을 사생활의 비밀들이 소셜 미디어라는 확산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형성하는 커뮤니티의 자정기능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자정기능이 작동하여 결과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당한 사람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도 신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뢰는 선부른 감정의 동조보다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기성 언론의 프레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140자 이내에 주장과 증거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재치 있는 짧은 트윗이 선호될 수밖에 없다. 간혹 이러한 분위기가 풍부하고 성찰적인 사유를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장점은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인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어떠한가? 트위터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이 있지만, 듣고 싶은 의견만 동조하고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동조하는 의견들이 급속히 네트워크되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가 크다. 이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의 실험이 지니는 위력만큼이나 그 실험이 파생시킬 실패의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학에 시장 실패란 말이 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또한 정부 실패나 국가 실패란 말도 있다. 칼자루를 주니까 자

기가 좋은 대로만 쓰더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사회 실패도 이야기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 실패 또는 '네트워크 실패'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와 사회는 모두 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에 '네트워크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들어가 규제를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시장이 통제하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항상 시장·국가·사회의 삼각형이 균형점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 어쨌든 소셜 미디어는 정치에 무관심하던 세대들에게 '뭔가 현실을 바꿀 수 있겠다'는 단초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자체적인 자정기능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 공공(公共)의 목적을 가지고 계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3) 소셜 미디어와 외교의 변환

외교 분야도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셜 미디어를 외교의 과정에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서부터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외교의 활동 영역이나 활동 주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외교와 맺는 관계는 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변수인 동시에, 더 나아가 외교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성적 변수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 측면, 즉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교의 주체를 변화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외교의 과정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려는 국내외의 시도들

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앞서 가는 나라는 패권국인 미국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를 미국의 공공외교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실 IT를 외교 과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IT를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외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9·11 이후,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 하락을 만회하려는 취지로 공공외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강조하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대중 속으로 깊게 침투할 수 있는 기발한 도구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세력이 '독립변수'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엘리트의 전문 영역이었을 외교안보 분야나 통상정책 등의 영역에 일반 대중이 견해를 제시하는 일이 늘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토론과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2008년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은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그 사건의 진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김상배, 2008; 송태은, 2011). 예전에는 단순히 여론이라고 치부되었던 일반 대중의 수동적 역할이 소셜 미디어 환경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다중(多衆, multitude)의 역할로 변화되었다.

끝으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외교 주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공공외교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IT를 단순히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주도해온 외교 자체의 변

환을 엮보게 한다. 이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속성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와 위계적 성격을 띠는 전통적 외교 전담 조직 간에 발생하는 일종의 역설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소셜 미디어의 도입 논의는 외교 전담 부처의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라는 분야의 성격상 개별 외교관들이 소속 부처의 입장과는 다른 개인적 견해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피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공공외교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요컨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도입은 기존의 외교 양식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여 국내외의 대중과 소통하는 외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교의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공외교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주체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외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4. 소셜 미디어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1) 세계 지식질서의 창발

이 책에서 사용한 소셜 미디어라는 말에 응축된 정보혁명의 영향이 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질서 형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이버 공간의 글로벌 이슈들이 늘어나면서, 이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

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을 중심으로 세계 정치군사질서가 모색되고, 20세기 후반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형성되었다면, 최근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규범 형성의 시도들은 ‘제3의 세계질서’의 태동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제3의 세계질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절한 명칭이 정착되지 않았다.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통칭하여 지식)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라는 의미에서 통칭하여 ‘지식질서’라고 불러 볼 수 있을 것 같다(Strange, 1994;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이 일정하게 조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규칙화된 패턴이다. 이러한 지식질서의 작동 방식은 권력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지식질서의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사회과학적 의제의 가시적 구도 안으로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학을 살펴보는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질서는 유사 이래 있어왔지만 최근 정보혁명의 진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세계 지식질서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 지식질서의 제1라운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NWICO(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운동의 대두라는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1982년 「맥브라이드 보고서」의 채택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DBS(Direct Broadcasting System), 즉 위성방송의 확산에 따른 초국적 정보 흐름(transnational information flows: TDF)이 개도국의 정보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얼마나 침해하느냐의 문제였다. 특히

국경을 넘는 정보 흐름의 활성화로 인해서 널리 보급된 초국적 시청각 미디어(audiovisual media), 특히 TV의 콘텐츠가 개도국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 구축의 노력은 역으로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지부진해졌다.

세계 지식질서의 제2라운드는 1990년대 들어 초국적 정보 흐름의 문제가 세계 무역의 쟁점과 결합되면서 벌어졌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 과정과 WTO의 성립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의 개방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은 물질상품과 마찬가지로 문화상품도 자유무역의 관념과 제도를 따르지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의 틀 안에 지식질서(또는 지식문화질서)를 담으려는 발상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지식문화질서가 경제무역질서에 셋방살이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경제무역질서와 지식문화질서의 포괄적 접근은 유럽 국가들의 반론에 직면했는데, 문화산업의 개방과 관련하여 유럽의 국가들은 스크린쿼터제 등을 내세워 보호주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스크린쿼터 문제와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연계하는 우회 전략을 펴기도 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본 세계 지식질서의 제3라운드는 2000년대 들어 이루어진 정보혁명의 진전과 인터넷 환경의 창출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지식질서 모색을 향한 노력에 획을 그은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린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환경으로서의 IT에 대한 인식,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협의와 광의의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등을 비롯하여 문화 및 언어 다양성,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등의 문제였다. 제3라운드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라는 국가 행위자들의 참여 외에도 민간 전문가 그룹과 글로벌 시민 사회 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험대를 만들었다는 데 있다.

2) 인터넷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렇게 변환과 창발을 겪고 있는 세계 지식질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3라운드에 접어든 세계 지식질서의 부상에 대응하는 적절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구도는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구의 주도권에 대한 국가 세력과 정부 간 국제기구의 도전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실상 메커니즘과 법률상 메커니즘의 대립이기도 하고,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유럽과 개도국들의 도전이기도 하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상배, 2010a: 143-170).

우선, 최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지식질서의 형성은 인터넷 분야의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국제제도의 형성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 형성의 노력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국제기구나 국제제도 또는 국제레짐이나 국제사회 등의 개념을 통해서 개념화되어왔다. 예를 들어, 인터넷 분야의 질서 모색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대상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국제레짐이 출현하거나, 또는 기존의 국제레짐이 새로운 분야로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신·구 레짐 간의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인터넷 분야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국

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던 전통적인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의 발상을 넘어선다.

인터넷 분야의 제도 형성의 이면에는 자율적 거버넌스를 옹호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있다. 인터넷의 관리는 그 성격상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 체계의 기본 골격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초창기부터 인터넷을 관리해온 미국 소재 민간기관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다. 여러모로 보아 ICANN은 개인, 전문가 그룹, 민간기업, 시민사회,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ICANN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면에 '미국'의 사실상 패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ICANN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터넷과 관련된 어젠다 설정을 주도한 세력은, 미국의 전문가 그룹과 인터넷 기업, 그리고 지적 재산권 옹호 세력과 미국 정부 등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집합체는 전면에 인터넷 전문가나 민간 행위자들이 나서고, 미국 정부는 ICANN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사실 이러한 집합체로서의 '미국'은 정보혁명의 초기부터 IT 분야 전반을 주도해왔다.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과 같은 IT산물을 최초로 개발하여 지구적으로 전파하고, 이러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IT산업을 일으키고 디지털 경제의 붐을 일으킨 나라이다. IT 분야에 대한 미국의 패권은 사이버 공간에도 투영되었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IT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기술혁신

과 비즈니스를 주도했는데,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둔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이러한 미국의 지식 패권, 특히 인터넷 관리에서 사실상의 패권에 대해서 유럽과 개도국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미국은 인터넷의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 행위자들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주창했다. 이에 비해 유럽과 개도국들은 IT 분야에서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려는 법률상(de jure)의 접근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와 기타 문화적, 규범적 차원의 문제가 개도국과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규범 형성 문제를 유럽이 주도하는 현상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특히 유럽과 개도국들은 초창기부터 인터넷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미국 내 민간기구인 ICANN의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예를 들어, EU, 중국, 브라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 새로운 정부 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미국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행 ICANN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다. 인터넷 발전의 초기에는 선발주자로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터넷이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여태까지의 관리 방식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ueller, 2010).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초창기에는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던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전면으로 나서려는 문제의식과 밀접히 맞물린다. 다시 말해,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행 과정에

국가 행위자들이 영토적 주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창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들이 ICANN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하부조직의 활동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각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ICANN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미국 외의 국가들의 힘을 모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ICANN이 행사해오던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대표들이 일종의 법률상 메커니즘을 내세워 도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김상배, 2010a: 168).

이렇게 ICANN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대안적 관리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최근 개도국과 국제기구까지 가세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UN 산하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주도하여 2003년 제네바, 2005년 튀니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바 있는 WSIS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WSIS의 준비과정과 본 회의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향후 인터넷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ICANN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가장 큰 쟁점이었다. 그러나 WSIS는 ICANN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폐회되었으나, 이후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위한 장으로서 IGF(Internet Governance Forum)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 간 협의체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상배, 2010a: p.169).

세계 지식질서의 제3라운드에는 아직까지는, UN의 정치군사질서나 WTO의 경제무역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체 쟁점을 아우르는 메타 질서의

메커니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각 분야와 쟁점별로 다층적인 트랙별로 규범 형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ICANN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쟁점이 다뤄지고 있다면, ITU와 WSIS 등을 통해서 정보격차와 개발협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후 IGF를 통해서 넓은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OECD IT장관회의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 총회를 통해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사이버 공간의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계 지식질서의 변환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에 새로운 대응 전략 모색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세계 지식질서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IT산업이나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나 인터넷 사용자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러나 인터넷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보화 수준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글로벌 정보사회의 의제를 개발하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각종 회의나 포럼에 참여하는 미시적인 의제 창출 전략을 넘어서 IT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좀 더 거시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5.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소셜 미디어와 정치사회 변환,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

제를 중심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의 국내외적 변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의식은 웹1.0 시대의 위로부터의 권력변환과 웹2.0시대의 아래로부터의 권력변환이 인터넷,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얽히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해부하는 것이다.

제1부 ‘소셜 미디어와 사회문화의 변환’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서 개인 차원에서 나타는 독특한 소통방식과 소통 관계의 특성,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SNS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디지털 유산과 잊혀질 권리 문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양식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제1장 ‘소셜 미디어, 그 소통의 특성’에서 **최항섭은** 소셜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소통 양식의 특징을 이론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최 교수는 소셜 미디어의 실시간 소통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가, 소통된 콘텐츠를 그 시간에서만 소비하고 미래에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현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들이 노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소소한 일상이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멋진 부분이 아니라 보통 감추고자 하는 부분이나 대수롭지 않은 부분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현재주의’ 윤리는 소통 관계의 잦은 ‘이동’을 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트위터 등을 통해서 부단히 새로운 소통 관계를 맺는 순간 이전에 소통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의미는 금방 사라지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최항섭은**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문화적 실천과 취향을 올려 공유하려는 행위를 전형적인 연출된 자기표현 행위 또는 인상관리 행위(impression management)라고 규정한다. 즉 자신의 총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나 다른 이들이 자신**

에게 기대하는 부분만을 보여준다(내용이 상반됨?)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며, 무대에서 각광받는 자신과 무대 아래로 내려온 실제의 자신 간의 괴리를 강화시킨다.

제2장 'SNS와 디지털 유산, 그리고 잊혀질 권리'에서 배영은 그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관계 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라이프 로그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SNS의 성격에 주목했다. 기존의 문서나 사진과는 달리 디지털 미디어는 보관된 정보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처리와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 사후에 그들이 남겨 놓은 SNS상의 콘텐츠나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과거의 사실을 디지털 기록 속에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까지 비교적 짧은 온라인 역사로 인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이나 제도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점점 온라인 영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일상을 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유산 처리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는 시급성을 가지는 이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영은 디지털 유산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국내외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본 후 합리적 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제3장 '소셜 미디어와 문화 생산/소비의 변화'에서 문상현은 디지털 기술이 야기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문화생산 및 소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문화산업의 생산 과정과 수용자의 문화소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는 문화권력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상현**이 주장하는 골자이다. 이러한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 융합(convergence)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기존 문화산업의 생산과 유통 방식, 수용자의 소비 양식에 야기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문화산업의 주요 행위자들인 기업과 문화상품 생산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음악산업에서 뮤지션과 음반사 및 기획사가 유튜브와 미스페이스 등을 팬과의 소통과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한편 문화소비 측면에서의 변화는 소셜 미디어가 수용자의 문화소비 양식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전통적으로 수용자의 관여나 개입이 제한되었던 문화생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문상현**은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이로 인한 문화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의 변화가 오랫동안 매스 미디어가 누려왔던 문화권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제2부 ‘소셜 미디어와 정치외교의 변환’은 소셜 미디어가 정치와 외교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정치변동의 계기를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외교정책 분야에서 발견되는 다중의 정치 참여 등도 살펴보았다.

제4장 ‘소셜 미디어와 시민권력의 부상’에서 **금혜성**은 새로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정치가 지니는 권력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소셜 미디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시민이 의제설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금혜성은 소셜 미디어가 가지는 다양한 정치적 속성들, 예를 들어 정치정보의 공유를 통한 여론의 형성, 유사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연계와 집합,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벌어지는 정치참여 활성화 등이 야기하는 정치적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벌어지는 시민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와 자발적 선거캠페인의 활성화를 소셜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금혜성은** 소셜 미디어가 20~30대의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대의민주제와 직접참여주의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민주주의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소셜 미디어의 공간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제5장 ‘디지털미디어와 정치사회 변동: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북한 사례’에서 **배영지는**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북한에서 디지털미디어 또는 소셜 미디어가 정치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배영지**가 견지하는 시각은 미디어의 역할을 사회경제적 구조, 정치제도와 권력집단들의 경쟁, 시민사회와 밑으로부터의 집단행동 등과 같은 맥락적 요소를 바탕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이집트에서는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과 범국민적 반정부 운동이 확대되는 와중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교환과 인적 자원 동원력과 만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성공적으로 벌어졌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의 경제적·정치적 불만이 증대되었으나, 야권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의 입지가 부실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산발적인 항의나 비판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나지 못했다. 북한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식량난, 3대 권력세습 등 반체제 운동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적 요건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철저한 외부 감시와 내면화된 통제 속에서 점증하는 불만을 조직화하고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배영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디지털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은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와 같이 급격한 정치사회변동을 촉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6장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중의 외교정책 논쟁’에서 **송태은**은 소셜 미디어가 외교정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의 정치참여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송태은은 대중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전문지식과 고급 정보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외교정책 사안도 포함하며, 심지어 이들의 온라인 논쟁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집합행동으로 전개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대중을 정치적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청중으로 인식했던 기존 학계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요 외교정책 사안에 대한 고급정보를 교환, 유포, 학습하며 토론을 거쳐 대항담론을 생산하는 다중(多衆)의 출현에 주목했다. 이러한 다중의 역할을 엿보기 위해서 거론하는 사례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천안함 사건, 한미 FTA 재협상,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한일군사정보협정 등과 같이 최근 한국의 주요 군사·안보 사안 및 무역 등의 외교정책 사안이다. 송태은에 따르면, 각 사례에서 동원되었던 다중의 집합지성과 집합행동은 단순한 다수의 세(勢) 모으기 차원을 넘어서 다중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상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보·지식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제3부 '소셜 미디어 시대의 거버넌스'는 소셜 미디어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미국 유타주와 한국 서울시의 정부변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바라본 인터넷, 개인정보, 정보격차의 문제를 비교사례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제7장 '소셜 미디어와 정부의 변환: 유타주와 서울시의 사례'에서 송경재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상을 구체적이고도 다각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소셜 미디어가 정부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송경재가 주목한 경험적 사례는 미국 유타주(Utah.gov)와 한국의 서울시 소셜미디어센터(<http://socila.seoul.go.kr>)이다. 이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송경재가 탐구한 것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정부의 변환이 던지는 정치적, 행정적 함의였다. 정부 정보 공개의 필요성 확대, 정책결정 과정의 접근성 강화, 대(對)시민 반응성의 향상, 시민참여의 선순환 효과, ICT 마인드를 가진 의 리더십의(탈자인듯?) 중요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이 반드시 장점만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포퓰리즘의 만연, 대응성의 높은 기대에 따른 시민 불만 가중, 대의제적 정치 과정의 왜곡 등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소셜 미디어 기반의 전자정부가 기존 전자정부와는 다른, 좀 더 참여 지향적이고 접근성이 강한 상호작용성을 가진 전자정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제8장 'SNS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박윤정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배경과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박윤정의 평가에 의하면, 2012년 ITU의 두바이 회의

를 계기로 본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2.0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BRICs를 중심으로 한 비서방 진영 사이에 사이버 공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박윤정은 미국 정부가 1998년에 세운 ICANN을 중심으로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치 갈등의 축은, 민간 운영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 공유 자원인 인터넷 주소 자원을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서방 진영과 개선책을 원하는 비서방 진영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구도에서 박윤정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2.0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권력의 해부 2.0’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21세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미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된 SNS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던지는 의미도 짚어 보았다. 박윤정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SNS 환경에서 클라우드 정보 관리의 문제는 또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9장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강희연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초국가적 성격이 극대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의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형·비정형 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정보사회의 ‘새로운 석유’로서 가치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규제는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ICT 기반 경제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물리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데다, 한 국가 영토 내에서만 경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의 규율 문제는 곧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문

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 간에 합의된 규범 또는 거버넌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하연은 사이버 공간상의 개인정보의 성격과 규제에의 합의 도출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초국가적 유통과 활용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늠해보았다.

제10장 ‘정보격차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이승주는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을 다루었다. ICT의 보급과 정보격차의 해소는 어느 한 행위자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함께 협력해서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다면적·다중이해관계자 접근(multipronged, multistakeholder approach)이 그것이다. 여기서 ‘다면적’이라는 말은 정보격차가 어느 한 차원이 아니라, 기술과 규제에서 민관협력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다중이해관계자 접근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승주는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의 보급과 확산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민관협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승주는 정부와 미디어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ICT의 확산뿐만 아니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교육

과 함께 ICT 활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권력의 변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맞물림’에서 **황주성은** 이 책에 담긴 글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는 인터넷 권력의 지형을 분석했다. **황주성에** 의하면 연결된 개인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인터넷 권력변환의 표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수면 아래에는 소셜 광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광고 플랫폼이 인터넷과 현실 경제를 연결시키는 핵심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웹2.0과 다른 점은 후자가 주로 개인을 익명적 집합으로 묶었던 반면, 전자는 개인을 사회적 관계로 네트워크화한 것이다.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지인’의 평가와 추천이 가지는 영향력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사회문화관과 정치관에서 개인의 부상은 경제관에서 소셜 광고를 가능하게 한 기초가 된다. 전통 미디어에서 ‘연결된 개인’에게로 넘어갔던 인터넷 권력이 다시 소셜 미디어로 환원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맞춤형 광고에 토대를 둔 웹2.0이 지구화를 모색하면서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개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도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황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소셜 현상’은 그 구체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인터넷의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 추천 문헌

- 김상배. 2008.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치사회 변동: 인터넷과 촛불집회」. 《지식의 지평》 제4권, 75~95쪽.
- _____. 2010a.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 _____. 2010b.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7권 제4호, 45~92쪽.
- _____. 2012a. 「SNS의 위력과 정치변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중앙 SUNDAY · 한국사회과학협회의회 편. 『한국사회 대논쟁』. 메디치, 268~278쪽.
- _____. 2012b. 「소셜 미디어와 공공외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미국의 전략」. 《국제정치논총》, 제52권 제2호, 117~142쪽.
-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 서키, 클레이. 2008. 『끌리고 쏘리고 들끓다: 새로운 사회와 대중의 탄생』. 갈리온.
- 송태은. 2011. 「천안함의 망제정치: 진실게임, 신뢰게임, 집합게임」. 김상배 편.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375~412쪽.
- 조화순 편. 2012. 『소셜 네트워크와 정치변동』. 한울.
- 한국언론학회 편. 2012. 『정치적 소통과 SNS』. 나남.
- Mueller, Milton L. 2010.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 Shirky, Clay. 2011. "The Political Power of Social Media." *Foreign Affairs*, Vol.90, No.1, pp.28~41.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